

주택담보대출에서 AI는 어디까지 허용가능한가?

고 제 현 (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)

- ⊕ 주택담보대출의 AI 활용은 기술 구현가능성 뿐 아니라 공정성·설명가능성·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독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어야 함. 주택금융에서 AI의 활용은 기존 서비스의 대체를 넘어 주택금융의 건전성과 포용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모색할 필요

1. 논의 배경

▶ 금융권의 AI 활용은 고객상담·상품 추천을 넘어 신용평가, 여신심사, 이상거래 탐지 등 주요 업무영역으로 확산, 주택금융분야에 있어서도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

- ③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정보와 AI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(SCB)를 발표(2026.04)
 - 매출·업종·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AI로 분석해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고, 2026년 하반기부터 16개 은행 약 2.2조원 규모 대출에 시범 적용 계획
-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는 AI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보금자리론의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「AI 기반 맞춤형 모기지 추천 서비스」를 도입(2026.3)
 - 고객의 희망 대출액과 소득, 대출조건에 대한 선호도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결합하여 대출한도, 만기, 우대금리 및 월 상환부담 등을 추천
 - 고객의 금리변동 위험회피 성향과 금리 전망 등을 반영하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예상 비용을 비교하고 적합한 금리 유형을 제시

▶ 한편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활용에 대해 강화된 위험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

- ③ 금융위원회는 2026년6월 「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」 개정안을 발표하고, 거버넌스·합법성·보조수단성·신뢰성·금융안정성·신의성실·보안성의 7대 원칙을 제시
 - ‘보조수단성’ 원칙은 현재 단계에서 AI를 업무의 보조수단으로 규정하고,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임직원이 수행하도록 명시. 위험 수준에 따라 사람의 개입 방식을 차등화하도록 요구

▶ 주택금융, 특히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에 있어 AI 활용은 기술의 구현성보다는 제도적으로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인가의 기준이 중요함

- 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, 금융시스템 안정성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, AI 활용은 효율성 뿐 아니라 공정성·소비자 보호·금융안정 등 공적 가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
- ⑤ AI 시대 금융혁신과 공적 가치의 조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적합한 금융 감독 거버넌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

2. 주택담보대출 분야 AI 활용의 주요 쟁점

▶ 주택담보대출 분야의 AI 활용은 서류처리 등 반복 업무의 자동화에서 소득·상환능력 검증, 위험평가, 연체위험 식별 등 대출 의사결정과 보다 밀접한 영역으로 확대

- ⑤ 미국 Rocket Mortgage는 AI를 활용해 모기지 신청서류의 인식·분류 및 데이터 추출을 자동화하고 있으며, 영국 Lloyds Banking Group 등은 소득확인 및 심사자료 검증·보완 등에 AI를 활용
 - 「Rocket Logic」으로 근로소득 증빙서류(W2), 은행 거래내역서 등 신청서류를 자동 식별하고 데이터를 추출
 - 2024년 2월 기준 월 150만건 이상의 모기지 신청서류의 약 70%를 자동 식별하고, 추출 데이터의 약 90%를 자동 처리하여 심사 업무의 수작업을 대폭 축소
- ⑤ 사후관리 측면에서 AI 활용은 연체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채무조정 심사절차 자동화 추진도 시도
 - 미국 BSI Financial Services는 상환패턴·경제적 어려움·부동산 정보 등을 AI로 분석하여 연체발생 이전 위험징후를 식별하고, 선제적 차주관리 및 채무조정을 지원
 - 미국 Rocket Mortgage는 AI·자동화 기반 예측 모형으로 연체 초기 단계에서 위험 차주를 식별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한편, AI기반 연체차주 채무조정 심사절차 자동화 추진

▶ 다만 현 단계의 AI는 대출 승인 자체를 전면 대체하기보다, 정보의 수집·검증과 위험평가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향

- ⑤ Fannie Mae의 2023년 모기지 대출기관 조사(219개 기관, 임원 242명)에서도 운영 효율성 제고가 AI 활용의 가장 큰 동기로 나타났으며(2023년 73%, 2018년 42%), 이상거래 탐지, 소득고용 확인, 서류 검증·표준화 등이 주요 활용 분야로 제시됨

▶ AI 활용범위가 대출심사와 위험평가 등 차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확대 될수록, 효율성·예측력과 함께 공정성(Fairness), 설명가능성(Explainability), 책임성(Accountability)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

- ② OECD AI Principles(2019, 2024)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주요 원칙으로 인간중심 가치와 공정성, 투명성과 설명가능성, 책임성 등을 제시
- ② 금융분야에서도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금융안정·건전성 등 전통적 규제 목표와 함께 알고리즘 차별, 투명성, 책임성 등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주요 규율과제로 부각(Aldasoro et al., 2024)

▶ (공정성, Fairness) 결과의 차이와 차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

- ② AI 기반 대출심사의 공정성은 단순히 집단 간 승인율·금리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넘어, 그 차이가 차주의 위험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데이터·모형의 편향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식별하는 문제
 - Bhutta, Hizmo & Ringo(2025)는 인종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미국 정부의 자동심사시스템(AUS)에서도 소수인종 신청자의 승인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지만, 신용점수·레버리지 등 관측 가능한 위험요인이 대출거절 격차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잔여 1~2%p의 격차도 미관측 위험요인이 일부 설명한다고 분석
- ② 반면 민감정보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가 대리변수(proxy)로 작용하거나, 과거 금융거래 경험에서 형성된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이 AI 모형에 재현될 가능성도 존재
 - (대리변수) 인종·성별 등 민감정보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(예. 거주지역, 특정소비·거래패턴)가 대리변수로 작용하여, 해당정보를 직접 쓰지 않아도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
 - (내재된 데이터 편향) 과거 금융거래 과정에서 형성된 데이터 자체에 차별적 결과나 표본의 불균형이 내재된 경우, AI가 차별적 패턴을 학습하여 과거의 불이익을 미래 심사에 재생산할 가능성

▶ (설명가능성, Explainability) 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

- ② 설명가능성은 단순히 AI가 ‘블랙박스’인지 여부보다 AI의 판단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문제
 - 소비자에게는 대출거절·불리한 조건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설명
 - 금융회사에는 모델의 성능과 특정 변수에 대한 과도한 의존, 집단별 결과 차이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모델관리 정보
 - 감독당국에는 AI 기반 심사가 소비자보호·공정대출·모델리스크 관련 규율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

- 따라서 실무적 쟁점은 복잡한 AI 모델을 단순모형으로 대체할 것인지보다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설명의 목적에 상응하는 설명·검증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음

▶▶ (책임성, Accountability) AI의 판단을 누가 지속적으로 관리·통제할 것인가

- 책임성은 오류 발생 이후의 책임소재뿐 아니라 모델의 개발·검증·승인·운영·모니터링·수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책임과 통제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
- AI 모델은 데이터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성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도입 단계의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, 실제 활용과정에서 성능 저하(model drift), 데이터 변화, 예기치 않은 오류·편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
 - 특히 외부 AI-벤더 모델의 활용이 확대될 경우 개발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모델의 작동원리와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
 - 미국 금융당국의 2026년 개정 모델리스크 관리지침도 모델위험의 크기와 사용목적 등에 따른 위험기반 모델관리와 지속적인 검증·거버넌스를 강조
- 외부 AI를 활용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모델의 작동과 결과를 검증·통제할 수 있는 역량과 관리 책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

3. 모기지 시장 AI 활용 감독 거버넌스 비교: 미국과 영국

▶▶ 미국과 영국은 AI에 대한 별도의 금융규율을 신설하기 보다 기존 금융규제의 연장선상에서 보호해 온 공적 가치를 AI 환경에서도 유지하는데 초점

- 다만 미국은 기존 법규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중심의 AI 위험관리를 요구하는 반면, 영국은 소비자 중심의 원칙기반 감독과 규제당국이 참여하는 지속적 실증·검증을 병행

① 미국: 기존 공정대출 규제와 금융회사 책임에 기반한 AI 위험관리

▶▶ AI 기반 의사결정에도 기존 공정대출 관련 법률의 차별금지 등 공정성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

- 신용기회균등법(Equal Credit Opportunity Act, ECOA)은 신용거래에서 인종·성별·연령 등 보호특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

- ⑤ 공정주택법(Fair Housing Act, FHA)은 주택담보대출의 승인·거절, 금리·수수료 등 대출조건뿐 아니라 담보평가·사후관리채무조정 과정에서의 차별도 금지
- ⑤ FHA의 차별적 효과(discriminatory effects) 판단에서는 외형상 중립적인 정책이나 관행이라도 특정 집단에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, 해당 기준의 필요성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차별적인 대안(less discriminatory alternative)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
 - 다만 최근 미국에서는 차별적 효과에 대한 행정적 규율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, 연방대법원은 Inclusive Communities(2015) 판결을 통해 FHA상 차별적 효과에 따른 책임을 인정

▶▶ AI 기반 대출모델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민간 모니터링 사례도 존재

- ⑤ AI 기반 소비자대출 플랫폼 Upstart는 2020~2024년 공정대출 전문 로펌 Relman Colfax의 독립 모니터링을 통해 AI 심사모델의 차별적 효과와 덜 차별적인 대안(Less Discriminatory Alternative, LDA)을 지속적으로 검증
- ⑤ 모니터링 과정에서 흑인 신청자의 승인격차가 확인되었으며, 기존 모델의 예측력을 유지하면서 승인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모델의 가능성을 검토

▶▶ AI 기반 의사결정에도 기존의 소비자 설명의무를 적용

- ⑤ 신용기회균등법(ECOA)과 Regulation B는 대출거절 등 불리한 조치(adverse action)에 대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주요 사유(specific reasons)를 제시하도록 규정
- ⑤ 이에 따라 AI가 신용평가·대출심사에 활용될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의사결정의 주요 근거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가능성(Explainability) 확보가 중요

▶▶ 최근에는 모기지 시장의 정부지원기업(GSE; Government-Sponsored Enterprise)을 통해 금융회사의 AI 위험관리 기준 구체화

- ⑤ Fannie Mae는 2026년 4월 Seller/Servicer가 Fannie Mae 관련 대출취급(origination) 및 사후관리(servicing) 과정에서 AI·ML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「AI/ML Governance Framework」를 도입
 - AI의 개발·도입·사용·유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과 절차, 책임자 지정, 정기적 검토 등을 요구하고, 외부 벤더·하도급업체의 AI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관련 위험을 관리하도록 규정

▶ 미국은 AI 활용에 대한 사전 승인보다 기존 법규에 따른 책임을 전제로 금융회사가 내부 위험관리·준수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규율

- ① 공정대출·소비자보호 관련 법규가 AI 활용의 기본적인 준수 기준을 제시하고, Fannie Mae 등 GSE의 AI 거버넌스 기준이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위험관리체계를 보완

② 영국: 소비자 중심 감독과 금융회사 책임 원칙에 기반한 AI 위험관리

▶ FCA는 기존의 소비자 중심 규제와 금융회사 책임체계를 AI 활용에도 적용

- ① 2025년 Mortgage Rule Review에서 AI가 판매절차·적격성 평가·사기탐지·행정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, 복잡한 사례에서는 인간의 판단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, FCA는 Consumer Duty와 SM&CR 등 기존 체계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상당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
- ② 이에 따라 AI 활용에서도 기술이나 모형 자체보다 A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·관리하는 것이 중요
 - 소비자보호 의무(Consumer Duty)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·서비스와 공정한 가치를 제공하고,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원 할 것을 요구
 - 고위경영진 및 인증제도(SM&CR)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별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고위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여, AI를 활용하더라도 관련 의사결정과 위험관리의 책임이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 내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역할

▶ FCA는 AI의 개발·활용 과정에 참여하여 위험과 통제방식을 함께 검증하는 실증적 접근을 병행

- ① AI Lab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AI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시스템을 시험하면서 AI의 위험과 적절한 통제방식을 감독당국이 함께 학습·검증
 - Supercharged Sandbox는 초기 단계의 AI 모델을 개발·시험할 수 있는 데이터·컴퓨팅 환경을 제공
 - AI Live Testing은 개발이 더 진전되어 실시장 적용을 앞둔 AI 시스템을 대상으로, 실제 또는 준실제 시장 환경에서 AI 시스템을 시험하면서 거버넌스·위험관리·모니터링 체계를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공동으로 검증

▶ 영국은 Consumer Duty와 SM&CR을 통해 AI 활용에 따른 소비자 영향과 금융회사 내부책임을 관리하면서, AI Lab 등을 통해 감독당국이 실제 AI의 위험과 통제방식을 함께 검증하는 접근을 병행

- ② 미국이 기존 법규상 의무와 금융회사의 내부 위험관리를 상대적으로 강조한다면, 영국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결과의 지속적 관리와 감독 당국이 참여하는 실증·검증을 보다 강조

4. 우리나라 AI 기반 주택담보대출 거버넌스 과제

▶ 우리나라는 AI기본법, 신용정보법,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AI 기반 금융에 대한 규율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어, 향후 과제는 새로운 규율을 추가하기보다 이를 주택담보대출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적용하고 실효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있음

- ② AI기본법의 고영향 AI 규율, 신용정보법상 자동화평가에 대한 소비자 권리,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에 따른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등 서로 다른 층위의 규율이 이미 형성
- ② 다만 각각의 적용대상과 목적·규율방식이 상이하고, 주택담보대출의 구체적인 업무와 의사결정에서 각 규율이 어떻게 적용되고 상호 연계되는지는 보다 명확히 할 필요

① ‘보조수단’ 원칙을 주택담보대출 심사단계별로 구체화

▶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보조수단성 원칙과 함께 위험수준에 따른 인간 개입의 차등화를 규정하고 있으나, 이를 주택담보대출 심사의 단계별 특성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

- ② 가이드라인은 업무 중요도·위험수준에 따라 인간의 개입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으나, 금융업무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각 심사단계에서 AI가 어느 수준까지 판단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음
- ② 특히 서류인식·정보검증과 같이 AI가 정보를 처리·보조하는 경우와 소득·상환능력 평가, 신용위험 평가, 대출조건 결정 등 AI의 결과가 대출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동일한 ‘보조수단’으로 보기 어려움
- ② 따라서 인간이 최종 승인했다는 형식 자체보다 AI가 실제 대출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회사의 위험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단계별 인간 개입 수준과 AI 활용범위를 구체화 필요

② 자동화평가에 대한 소비자 권리의 실효성 확보

▶ 신용정보법(제36조의2)은 자동화평가에 대한 설명·이의제기 등 소비자 권리의 기본틀을 이미 마련하고 있어, 새로운 권리의 도입보다 복잡한 AI 기반 대출심사에서도 기존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

- ⑤ 다만 복잡한 AI 모델에서는 자동화평가의 주요기준과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를 어느 수준까지 제시해야 소비자가 대출결과를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한지가 중요
 - 설명가능성은 알고리즘의 기술적 구조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, 대출거절·불리한 조건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금융회사가 파악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체화 필요

③ AI 활용에 대한 지속적 검증·책임체계 강화

▶ AI 모델은 데이터·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성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도입단계의 검증뿐 아니라 실제 활용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점검·관리가 중요

- ⑤ 금융회사가 AI 도입 이후에도 모델 성능뿐 아니라 대출결과와 소비자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, 예상하지 못한 편향·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모델을 수정하거나 인간의 개입을 강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
 - OECD(2026)는 금융 AI 감독에서 모델의 기획·설계·개발·운영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(planning, design, development and operation phases)의 위험관리가 중요하며, 우리나라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역시 이러한 단계별 위험 관리체계를 두고 있다고 평가
- ⑤ 특히 외부 AI 모델·데이터의 활용이 확대될 경우에도 대출심사에 AI를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모델의 작동과 결과를 검증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유지할 필요

▶ 현재 금융당국도 「금융분야 AI 위험관리프레임워크」, 「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안내데스크」 등을 마련하고 AI 에이전트 시범사업을 검토하는 등 AI 위험을 실제로 검증·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·확대하는 단계

- ⑤ 향후 이러한 기반을 대출심사 등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의 성능과 위험을 실제 데이터와 운영환경에서 검증하고, 그 결과를 감독기준과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관행에 환류하는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

5. 결론 및 시사점

▶▶ 주택담보대출에서 AI 활용은 기존 업무를 기술로 대체하는데 그치지 않고, AI를 통해 확보된 효율성을 금융서비스의 질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

- ③ 서류처리·정보검증 등 반복적 업무의 자동화는 비용과 처리시간을 줄이는 동시에, 복잡한 사례에 대한 판단과 상담 및 사후관리 등 인간의 전문성과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역에 인력을 보다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여력 제공
- ③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차주의 소득·자산 뿐 아니라 생애주기와 주거 선택이 결합된 장기 금융상품인 만큼, AI의 정보처리·예측 역량과 인간의 전문적·맥락적 판단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업무와 의사결정 구조를 모색할 필요

▶▶ 주택담보대출 업무 구조상 정보를 처리·보조하는 단계와 대출심사·조건결정과 같이 차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 요구되는 검증·설명 요건이 다르며, AI 개입 수준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통제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

- ③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새로운 AI 규율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금융규제가 보호해 온 가치와 책임체계를 AI 환경에서도 작동시키는 방향을 제시함
- ③ 우리나라도 AI기본법·신용정보법·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등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는 바, 향후 과제는 이를 주택담보대출의 서비스 단계에 맞게 구체화하고 실효적으로 작동시킬 것인가에 있음

▶▶ 궁극적으로 AI 기반 주택담보대출 거버넌스는 기술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율에 머무르기보다, AI가 창출한 효율성과 인간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주택금융의 건전성과 포용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을 지향할 필요

- ③ 특히 정책금융기관은 다양한 차주의 상황과 금융수요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AI 활용 방식을 모색함으로써, 포용적 주택금융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

| 참고문헌 |

- 금융위원회(2026), 「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」 개정안.
- 금융위원회(2021), 「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」.
- 금융위원회(2026), 「신용평가체계 개편,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」, 보도자료, 2026.7.27.
- 한국주택금융공사(2026), 「주택금융공사, 인공지능(AI) 기반 맞춤형 모기지 추천 서비스 개시」, 보도자료, 2026.3.10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신용정보법) 제36조의2.
-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(AI기본법).
-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(2022),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Circular 2022-03: Adverse Action Notification Requirements in Connection With Credit Decisions Based on Complex Algorithms, 2022.5.26.
-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(2023),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Circular 2023-03: Adverse Action Not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per Use of Sample Forms, 2023.9.19.
- Financial Conduct Authority (2025), Mortgage Rule Review: Feedback to DP25/2 and Roadmap, FS25/6.
- Financial Conduct Authority (2026), AI Lab.
- Financial Conduct Authority (2026), Supercharged Sandbox.
- Financial Conduct Authority (2025-2026), AI Live Testing.
- Fannie Mae (2023), Mortgage Lenders Cite Operational Efficiency as Primary Motivation for AI Adoption.
- Fannie Mae (2026), Lender Letter LL-2026-04, "Governance Framework on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,"
-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, OCC & FDIC (2026), Revised Guidance on Model Risk Management, SR 26-2, 2026.4.17
- OECD (2024), OECD AI Principles.
- OECD (2026), Supervi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Finance: Challenges, Policies and Practices,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Papers, No. 54, OECD Publishing, Paris.
- U.S.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, Fair Housing Act, 24 C.F.R. §100.500
- U.S. Supreme Court (2015), Texas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Affairs v. Inclusive Communities Project, Inc., 576 U.S. 519.
- Aldasoro, I., Gambacorta, L., Korinek, A., Shreeti, V. & Stein, M. (2024), "Intelligent Financial System: How AI Is Transforming Finance," BIS Working Papers, No. 1194,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.
- Bartlett, R., Morse, A., Stanton, R. & Wallace, N. (2022), "Consumer-Lending Discrimination in the FinTech Era,"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, 143(1), 30-56.
- Bhutta, N., Hizmo, A. & Ringo, D. (2025), "How Much Does Racial Bias Affect Mortgage Lending? Evidence from Human and Algorithmic Credit Decisions," The Journal of Finance, 80(3), 1463-1496.
- Relman Colfax(2022), "Fair Lending Monitorship of Upstart Network's Lending Model: Third Report of Independent Monitor", September 16, 2022
- Rocket Companies (2024), "Rocket Companies Introduces Rocket Logic AI Platform to Make Homeownership Faster and Easier," Press Release, 9 April 2024.
- The MortgagePoint (2026), "The AI Imperative in Mortgage Servicing," 29 June 2026
- Lloyds Banking Group (2025), "Lloyds Banking Group Accelerates AI Innovation with Google Cloud," Press Release, 9 April 2025; Google Cloud, Lloyds Banking Group Case Study.
- BSI Financial Services, "Practical Uses of AI in Mortgage Servicing," MBA Servicing Newslink, 3 February 2026.